

‘위탁가정 아동지원사업’ 제자리 걸음

광주·전남 예산 부족 ‘초기 정착지원금 전무’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정부지원 등 절실

광주·전남지역 위탁가정 아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위탁가정 사업이 각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지원이 전무하고,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금까지 차등 적용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서 부모 질병·이혼·학대·사망 등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복지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져 양육되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모두 1,312명이다.

지난 2000년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가정위탁제도는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위탁제도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와 의지에 따라 양육보조금 규모가 들쭉날쭉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정착금 지원이 다. 위탁 초기엔 아이 생필품 등 구입할

것이 많아 경제적 부담감이 큰 게 사실이다. 현재 광주·전남은 관련 예산 등의 문제로 인천·울산·경기도 등에서 주는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애초 광주·전남은 편성된 정착지원금이 없고 여력이 안 된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나마 광주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1회에 걸쳐 위탁아동 가정에 100만원을 정착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또한 친족 등에게 아이가 맡겨질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위탁가정의 양육보조금도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행히 광주·전남은 매월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전국 15곳 지자체는 12~15만원에 그치고 있다.

아이를 위탁양육하는 김모씨(52)는 “지자체에서 아이 몫으로 나오는 기초생활비와 양육보조금은 50만원가량이지만,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며 “양육보조금 예산이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각 지자체별로 차등 없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은 부족한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위탁 지원 예산 신경 쓸 수 없다”며 “보육시설도 함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지자체로 위탁양육사업까지 이관된다 보니 예산

부족 등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위탁양육 취지는 일반가정서 아이의 자립을 돕는 게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 및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아동복지 한 전문가는 “위탁양육 가정에서 지자체 지원이 열약해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4	순천	2~7	광양	2~8
나주	-1~5	목포	1~3	여수	5~8

일출 07:25 일몰 17:20
월출 13:40 월몰 00:27

장성	-1~4	흑산도	5~6
담양	-2~4	구례	0~5
화순	-1~5	곡성	-2~4
영광	-2~2	완도	3~6
함평	-1~4	강진	0~6
무안	1~4	장흥	0~6
영암	0~5	해남	1~5
진도	3~5	고흥	0~7
신안	1~5	보성	-1~6

목포	만조 08:01 20:39	여수	만조 03:23 16:08
	간조 01:45 13:35		간조 09:02 22:4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전남대 민주길 조성사업 착공

내년 5월께 완공 예정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교정의 기념공간들을 연결하는 민주길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봉관(옛 본관) 잔디광장에서 민주길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석 전남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5·18단체 관계자·최경환 국회의원·문인 광주 북구 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 민주길은 80여억원을 들여 학내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11곳을 3개 노선, 5km로 잇는 공간 재생사업이다.

민주길의 중앙인 ‘정의의 길(1.7km)’은 민주공원·박관현의 언덕·윤상원의 숲·김남주의 길·교육지표 마당·민주 햇볕벽화마당·박승희 정원 등을 잇는다.

동쪽 ‘인권의 길(1.8km)’은 용봉 열사 정원·민주열사 정원·후문과 용지를 지나 정문의 5·18 소공원으로 연결되고 서쪽 ‘평화의 길(1.5km)’은 윤한봉의 숲과 민주공원까지다. 민주길은 5·18 40주년인 내년 5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전남대 정병석 총장은 “민주길은 민주주의의 교육장이자 학생·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4일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전남대학교 민주길 조성사업 기공식’에서 정병석 전남대 총장, 5·18관계자, 민주인사, 동문 등 참석자들이 박관현 열사의 언덕길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약물투여 중단 환자 사망 법원, 의료진 일부 과실 인정

법원이 약물 투여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병원 의료진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A씨 등 4명이 광주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병원 측은 A씨 등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지속적인 투여가 권고되던 특정 약물의 투여를 중단할 만한 사정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광민 기자

전 여친 부모 비닐하우스 방화 2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방화 교사 혐의로 A(22) 하사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 한 화훼단지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방화를 B씨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별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450만원

을 주기로 약속하고 범죄를 사주했다.

실제 B씨는 해당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 2동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이후 방화 혐의점을 포착, B씨 붙잡은 뒤 이를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나눈 SNS 대화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이관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군 헌병대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 기자

광주경찰 5·18 사료 발굴 본격화

TF 확대·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

광주경찰이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TF를 확대·구성해 경찰 관련 5·18 사료를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광주경찰청은 경정급 팀장 등 모두 4명으로 ‘경찰 사료 발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TF는 경정(팀장) 1명·경감 1명·경위 이하 2명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당초, 사료 발굴은 지방청 내 경무계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경찰 관

련 5·18 사료 발굴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를 감안 TF를 확대·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일까지 진행한 직위 공모에는 팀장 등 다수의 지원자가 있었으나, 팀원 등이 채워지지 않아 직위 공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5·18 사료 발굴의 운영 방향도 정리됐다. 광주경찰은 1980년 5·18 당시 민주·인권 경찰상을 재조명한다는 추진 방향을 세우고, 옛 전남도청에 위치

한 경찰국 복원에 필요한 자료 및 당시 근무자 진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소 운영 기간은 이달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로 잡았는데, 조사 경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남경찰국 등이 옛 전남도청과 함께 원형 복원되고 5·18 40주년 기념일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 경찰 자체 5·18 자료가 전무하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사료 발굴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상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경찰 관련 5·18 자료 수집·정리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중국어선 2척 담보금 받고 석방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2시 39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215t 쌍타망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준법제한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우리 해역으로 진입해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1만1,884kg와 7,544kg를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한 어선은 한국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장 15cm 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총 1억 6,000만원을 징수하고 이들 어선을 이날 오전 풀어줬다. /목포=김동균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함께해요 청년창업!

청년의 열정을

복구가 응원합니다.

청년도약! 예비창업가에서 성공강소기업으로

청년창업 종합 지원 시스템

청년창업이 뿌리내릴 토양마련

청년창업이 움트도록 영양공급

청년창업이 열매 맺을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북구 | 일자리정책과 T. 410-6578

GWANGJU CITY BUK-GU